

원화 유동성 공급 확대가 절실하다

유병규 경제연구본부장

외화유동성 문제가 해소되었지만 ‘산 넘어 산’ 이라고 국내 경제의 시름은 오히려 더 깊어지고 있다. 내·외수 경기의 하강 속도가 가팔라지면서 우리 경제의 3대 취약 부문에 대한 근심이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는 까닭이다.

첫째는 급속히 불어나는 가계 부채다. 한국의 가계 부채 증가 속도는 미국보다도 2배 정도 빠르다. 가계 가처분소득 대비 금융부채 배율은 미국과 일본의 1.4배와 1.2배보다 높은 1.5배다. 은행의 가계대출 연체율도 점차 높아지는 추세다.

두 번째는 하향세를 나타내는 부동산 경기다. 가계 부채 구조를 보면 총 가계 부채의 3분의 1 정도가 부동산담보대출이다. 은행 대출의 경우는 60%가 이에 해당한다. 부동산담보대출 비중이 높은 상황에서 부동산 가격의 급락은 가계 부실을 키워 국내 경제를 위기로 몰고 갈 시한폭탄을 만드는 것이나 다름없다.

세 번째로 중소기업의 업황이 악화되고 있는 점이다. 중소기업의 신용위험지수가 가계나 대기업보다 훨씬 빠르고 높이 올라가면서 중소기업 대출이 급속히 줄고 있다. 은행들의 수익성도 저하되고 있어 은행만 나무랄 수도 없다. 경기침체 속에서 자금 공급이 여의치 않으면 중소기업의 줄도산을 피해 가기는 어려울 것이다.

국내 경제의 3대 취약 부문이 초래할 수 있는 최악의 시나리오는 실물과 금융의 복합불황으로 일본처럼 장기 침체 국면에 빠져드는 것이다. 다시 말해 실물경기 악화, 부동산 가격 급락, 가계 부채 상환능력 상실, 금융기관 부실화, 국내 유동성 경색 심화, 실물경기 급랭이라는 일련의 경기 침체 도미노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는 말이다.

지금은 국내 경기의 연착륙을 유도하여 최악의 상황을 막아야 하는 바로 그 시점이다. 가장 시급한 대책은 경제 난국에 대한 정책 당국들의 공감대 위에서 우리 경제에 충분한 원화 유동성을 공급하는 일이다. 가계 파산이나 기업 부도를 최대한 줄여 국내 경기의 급락을 막아야 하기 때문이다. 국내 경기의 하강 속도가 예상보다 빨라진다면 이를 회복하기 위한 비용은 지금보다 몇 배 더 들 수밖에 없다.

국내 경제 성장률이 만일 2%대에 머물게 되면 정치 사회적 불안정과 혼란을 그 누구도 감내하기 어려울 것이다. 유동성 공급 확대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기준금리를 과감하게 낮추어야 한다. 그동안 보수적인 금리 정책으로 미국, 일본과 같은 선진국들에 비해 대폭적인 인하 여력을 갖게 된 것은 한국은행의 큰 공이다. 다행히 유가 하락, 환율 안정 등으로 금리 인하 부담도 없다. 통화교환협정이라는 신무기로 외화 유동성 문제를 단번에 해결한 통화 당국이, 이번에는 예상을 뛰어넘는 대담한 금리 인하로 국내 경제의 시름을 또한 번 덜어주기를 기대한다.